

목소리 커지는 광역단체장들

정부·당과 '맞짱'... 정치 위상 키운다

'3김' 이후 리더십 공백... 정치권 백가쟁명 구도

김문수·김두관 대권주자로... 강운태·박준영도 거론

정치권에서 광역단체장들의 목소리가 전례 없이 커지고 있다. 정국 현안을 놓고 정부와 맞서는 것은 물론 지역 현안을 놓고 당 지도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일이 시시로 일어나고 있다.

당장,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문제와 관련,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7일 한미 FTA 비준안 처리의 핵심 쟁점인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A) 조항을 재검토하고 세수 감소와 소상공인 보호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외교통상부와 행정안전부에 제출, 파문을 일으켰다.

여기에는 박준영 전남지사는 지난 9일 민주당의 통합 및 연대 논의와 함께 FTA 대응 전략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가 폐쇄주의에 빠져있다고 직격탄을 냈었다.

박 지사는 지난 5월에도 호남의 선도사업인 신재생 에너지 사업과 관련, 정부가 나눠먹기 방식으로 각 시도에 페주고 있다고 평면 비판하며 이명박 정부가 규정한 '5+2 광역경제권'에서 탈퇴하겠다며 압박에 나서기도 했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지난 9일 한미 FTA의 강행처리에 반대한다며 여야 정의 문제점을 보완, 내년 1월에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장을 나타냈다.

강 시장은 지난 5월, 과학벨트 광주 유치 문제와 관련, '통 큰 양보론'을

내세운 손학규 민주당 대표에 '민주당 협약론'을 주장하며 대립각을 세운 바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여권에서도 마찬가지.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지난 8일 한 나라당의 퇴임인 강남과 영남에서 50% 물갈이를 해야 한다는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켰다. 김 지사는 지난해부터 민간인 사찰 문제 등 정국 현안과 관련, 수시로 청와대와 마찰을 빚은 바 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무상급식 등과 관련, 독자적 행보에 나서 하나님

당과 갈등을 빚었으며 무상급식 주민 투표에서 패배한 뒤, 여권의 만류에도 시장직을 사퇴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처럼 광역단체장들의 목소리가 커진 것은 정치 및 정당 구조의 변화에 기인한다는 평가다. 한국 정치사의 최대 주주였던 3김(김대중·김영삼·김종필)의 영향력이 사라지면서 정치 및 정당 구도가 시대적 이슈를 선점하는 등 정치적 경쟁력에 기반한 백가쟁명 구도가 펼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경제를 모로로 대권을 잡으면서 광역단체장의 위상도 대권 주자 반열도 빛을 빛은 바 있다. 여기에 내년 대선 구도도 유동성이 커지면서 '용 꿈'을 꾸는 광역단체장들이 휘발성이 강한 이슈에 민

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현 광역단체장 가운데 김두관 경남지사와 김문수 경기지사 등은 내년 대선 주자로 꼽히고 있으며 안희정 충남지사와 송영길 인천시장도 차차기 대선 주자로 거론되고 있다. 강운태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지사도 호남권 주자로 민주당의 내년 대선 경선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과거와 같은 정당 체제가 봉고된 상황에서 광역적 지지 기반을 확보한 광역단체장의 위상은 당 지도부와 맞먹는 상황"이라며 "특히, 광역단체장의 대선 도전 기반이 강화되면서 소신 발언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한국 도착 한 성김 주한 미대사

미수교 이후 129년 만의 첫 한국계 미국 대사인 성김 주한 미국대사

가 1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가족과 함께 입국해 취재진에게

/연합뉴스

손을 흔들고 있다.

광주 3조2864억원·전남 5조3503억원

내년 예산안 편성... 시·도의회 제출

광주시는 2015하게유니버시아드 대회 시설확충비 463억5000만원과 제2컨벤션센터 건립비 247억1000만원을 비롯해 총 3조2864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 10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올해 예산 3조279억원보다 8.5%인 2585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일반회계는 2568억원이

분야별로는 일자리 확충에 69억 1400만원, 학교급식 및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357억2500만원, 특성화 도서관 및 문화산업 투자진흥지구 추진에 115억9500만원, 사회적 약자보호에 298억3600만원 등이 포함됐다.

전남도는 2012 F1대회 운영비 150억 원 등을 포함한 5조3503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 이날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올해 예산 5조3503억원

회에 제출했다. 이는 올해보다 2.2%인 1159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일반회계는 1477억원이 늘어난 4조659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318억원이 감소한 6913억원이다. 전남도는 내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살리기, 서민생활 안정 대책에 집중투자했다고 밝혔다.

분야별 투자규모는 친환경농업 육성 및 농림해양수산분야 1조1065억원, 도민복지증진 분야 1조839억원, 일반공공행정분야 8005억원, 사회간접자본 확충분야 7968억원 등이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10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인 국회 본회의가 여야 합의로 취소됐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계속되고 있는데다, 처리 안건이 많지 않아 여야 합의로 본회의 개최를 취소했다고 10일 밝혔다.

본회의가 취소된 것은 지난 3일에 이어 두 번째다. 다음번 본회의는 이달 24일이다. 양당은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의 핵심 쟁점인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A)에 대한 민주당 절충안을 놓고 물밀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해결되나.

▲ 일단 재협상을 한다는 조건이 계기가 될 것이다. 재협상에서 미국 정부가 ISA 제도를 폐기하지는 않겠지만 신중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ISA 재협상을 통해 재심 제도를 도입하거나 WTO에 재심을 의뢰하는 방법 등의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문제는 한국 정부의 의지다. 이를 위해 서라도 차기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해야 한다.

-ISD 재협상 절충안에 동의한 민주당 의원은.

▲ 45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가운데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 핵심 인사들도 많이 포함돼 있다. 10여명의 의원들은 당 지도부의 입장을 고려, 이를 밝히기를 꺼려하고 있다. 일단 한나라당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 상황이 급진전될 가능성이 크다.

-야당 간사로서 여당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최소한 ISD 재협상 방안이라도 받아 들여야 한다. 이와 함께, 한미 FTA 협정으로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농어민과 중소기업, 종소 상인들을 위한 철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한미 FTA와 국내법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한 대비책도 철저하게 마련해야 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재심제 도입 등 절충안 여야 공감대 확산"

민주당 의원 45명 동의

與 수용땐 비준안 처리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대치 국면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온건파가 제시한 '국회 비준 조건으로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 재협상' 카드가 주목받고 있다. 특히, ISD 재협상 카드는 여야 내부에서 긍정적 여론이 확산되고 있어 막판 합의점을 도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 외교통상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동철 의원(광산갑)을 만나 ISD 재협상 카드에 대해 들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한미 FTA 비준동의안으로 정국이 들썩이고 있다. 해결책은.

▲ 가장 좋은 방법은 한미 FTA 협정 내용 가운데 독소 조항을 모두 제거하는 것이다. 그러나 양국의 입장이 있는 만큼 현실적이지 못하다. 차선책으로 한국 국회가 ISD 재협상이 이뤄질 때까지 한미 FTA 비준안을 처리하지 않는 것이다. 국회에 부여된 일부무역협정(FTA) 협정처럼 '소 읽고 외양간 도고지치 못하는' 우를 범하게 된다.

-여야 지도부가 반대하고 있어 협실화 가능성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 항상 강경파들이 문제다. 하지만 여야 의원들 사이에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오히려 남경필 위원장과 이 문제를 놓고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상당한 진척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ISD 재협상이 이뤄지면 문제가

국회 본회의 취소

한미 FTA 처리 연기

국회 본회의 취소

한미 FTA 처리 연기

국회 본회의 취소

한미 FTA 처리 연기

국회 본회의 취소

한미 FTA 처리 연기

국회 본회의 취소

한미 FTA 처리 연기

국회 본회의 취소

한미 FTA 처리 연기

국회 본회의 취소

한미 FTA 처리 연기

국회 본회의 취소

한미 FTA 처리 연기

국회 본회의 취소

한미 FTA 처리 연기

국회 본회의 취소

한미 FTA 처리 연기

국회 본회의 취소

한미 FTA 처리 연기

국회 본회의 취소

한미 FTA 처리 연기

국회 본회의 취소

한미 FTA 처리 연기

국회 본회의 취소

한미 FTA 처리 연기

국회 본회의 취소

한미 FTA 처리 연기

국회 본회의 취소

한미 FTA 처리 연기

국회 본회의 취소

한미 FTA 처리 연기

국회 본회의 취소

한미 FTA 처리 연기

국회 본회의 취소

한미 FTA 처리 연기

국회 본회의 취소

한미 FTA 처리 연기

국회 본회의 취소

한미 FTA 처리 연기

국회 본회의 취소

한미 FTA 처리 연기

국회 본회의 취소

한미 FTA 처리 연기

국회 본회의 취소

한미 FTA 처리 연기

국회 본회의 취소

한미 FTA 처리 연기

국회 본회의 취소

한미 FTA 처리 연기

국회 본회의 취소

한미 FTA 처리 연기

국회 본회의 취소

한미 FTA 처리 연기

국회 본회의 취소

한미 FTA 처리 연기

국회 본회의 취소

한미 FTA 처리 연기

국회 본회의 취소

한미 FTA 처리 연기

국회 본회의 취소

한미 FTA 처리 연기

국회 본회의 취소

한미 FTA 처리 연기

국회 본회의 취소

한미 FTA 처리 연기

국회 본회의 취소

한미 FTA 처리 연기

국회 본회의 취소

한미 FTA 처리 연기

국회 본회의 취소

한미 FTA 처리 연기

국회 본회의 취소

한미 FTA 처리 연기

국회 본회의 취